



주간통일정세 2009-13(2009.03.23~03.2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1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장 시찰(3/2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고 이 발전소를 “강성대국” 건설 목표 해인 2012년까지 “무조건 완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전기 문제를 우선 풀어야 지금 우리 당이 경제강국 건설에서 중심고리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석탄공업,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추켜세울 수 있고 경제의 전반적 활성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 수 있다”고 주문
- 방송은 김 위원장의 “명령에 접한 즉시” 북한군 건설부대들이 “현지에 달려와 치열한 건설 전투에 진입했다”면서 “희천발전소들의 전체 건설자들은 아직 배낭도 채 풀어놓지 못한 때에” 김 위원장이 시찰을 왔다고 전함으로써 김 위원장이 이 발전소의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최근 군 건설부대를 집중 투입한 것으로 추정됨. 김 위원장은 “기존 관념으로 보면 10년 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3년 반이라는 단기간에 끝낸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힘겨운) 과제”라며 공사를 독촉
- 발전소 시찰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박남기 장성택이 수행

● 김정일, 황남도 재령광산 현지지도(3/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황해남도 재령광산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김 위원장은 채굴장과 광원들의 작업 모습을 직접 둘러본 뒤 철광석 증산을 위해 “박토를 적극 앞세우고 모든 채굴 및 운반, 사별 설비의 대형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또 “철광석은 나라의 부강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자원인 만큼 한덩어리의 쇠돌이라도 모조리 이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탐사를 앞세워 예비광량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심층채굴대책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 그는 “이 광산의 광부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철 바깥에서 일하므로 이들의 사업과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광원들을 위한 후방사업의 강화도 지시



- 현지지도에는 김락희 황남도 당 책임비서와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동행
- * 재령광산에는 3천300만t 이상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채굴된 철광석은 인근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에 공급

● **김정일 위원장 동생 김경희 중태설(3/24, 동아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이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부인 김경희(63)가 알코올의존증 합병증으로 의식불명에 가까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4일 동아일보가 보도, 이 신문에 따르면 2008년 10월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북한으로 데려간 프랑스 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사비에르 루 씨(57)의 주 치료 대상도 김경희였던 것으로 전해짐.
- 김경희는 오랫동안 알코올의존증을 앓아 뇌에도 치명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정남이 지난해 외부 노출 위협에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루 씨와 함께 평양에 들어간 것은 장조카로 평소 자신을 아꼈던 고모와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라는 것
- 또 다른 베이징의 소식통도 “지난해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나올 때 김경희가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심각한 상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 낙점’ 확산(3/23, NK In & Out; 열린북한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삼남인 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북한 당·군 간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 인권단체인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온라인 소식지 ‘NK In & Out’은 23일 “황해도 소식통”을 인용해 “황해도내 군·당 간부들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
- 소식지는 또 “평양을 다녀온 소식통에 의하면, 평양 시민들의 상당수도 김정은이 다음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며 “이 소식통은 1월말 친하게 지내던 무역일꾼의 입을 통해 들었는데 김정은이 후계자로 확정됐으며 이는 군·당 간부에게도 정확하게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만드는 온라인 소식지 ‘열린북한통신’도 이날 함경북도 “청진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청진 군부대의 일반 병사들이 3월 현재 김정일 아들을 ‘친애하는 장군, 김대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 아들에게 “수령급 호칭인 ‘친애하는’ 호칭”이 붙었다는 것은 “3대 세습 방침이 확정됐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
- 이 소식지는 “또 다른 내부 소식통은 신의주의 외화별이사업소 당



원 강연회에서 초급당 비서가 김정일의 아들을 ‘친애하는 김 대장, 친애하는 김 장군’이라고 부를 것을 공식 포치(통보)했다고 전해온 바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신의주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몇번째 아들을 ‘친애하는 김 장군, 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

나. 정치 관련

● 北, 국제사회 압력에 핵실험 협박(3/29, 노동신문)

- 북한이 4월 4~8일로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2차 핵(核)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 반발, 노동신문은 29일 “(로켓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정, 토의만 되면 6자회담은 완전 파탄나게 될 것”이라며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김정일, 생일날 모임서 “반드시 이긴다” 강조(3/2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생일인 2월 16일 모종의 실내 집회에서 북한의 내외 정세와 그에 따른 자신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8일 노동신문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강산에 차넘치던 지난 2월의 경사로운 날” 김 위원장은 “혁명의 수뇌부의 영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보도
- 노동신문은 “2012년까지는 이제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장군님만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장군님만 받들면 우리의 행복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 또 “혁명은 본질에서 있어서 공격전이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격은 확고부동한 난관극복의 방식, 미래개척의 방식, 승리쟁취의 방식”이라거나 “피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주동적인 공격을 좋아하시며”, “시련이 막아설수록 더욱 더 완강한 공격으로! 이것이 백두산 장군의 혁명하는 본때이고 불변의 투쟁방식” 등으로 김 위원장의 대내외 정책 스타일을 설명

● 조선신보, 北로켓에서 문제는 권리박탈 적대행위(3/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진짜 문제는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빼앗으려는 일본 등의 적대정책이라고 주장
- 신문은 28일 ‘우주개발은 모든 나라에 인정된 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학기술을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용하려는 조선(북한)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적대국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문 제시되어야 할 것은 요격소동을 벌이며 ‘북조선 위협론’을 고취하는



일본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불법시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적대행위”라고 언급

- 신문은 특히 “운반로켓 기술의 군사전용이 가능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 탑재하는 것이 위성인가 탄두인가 하는 차이는 크다”며 “미국은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조선은 기술의 평화적 이용목적은 내외에 공언하고 그에 따라 모든 일을 밀고 나가고 있다”고 ‘평화적 목적’을 재차 강조
- 신문은 특히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는 한·미·일의 입장과 관련,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후 발표된 안보리 의장의 언론발표문은 “어느 나라나 평화목적의 우주개발 계획이라면 추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일부러 강조했다”고 반박

● 6·15선언 남·북·해외위, ‘실천대중운동’ 벌이기로(3/28,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평양에서 위원장 회의를 갖고 오는 6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남측에서 김상근 신임 상임대표 등 5명이 참가한 가운데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북남공동선언 지지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이 기간에 북남공동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통신은 보도
- 회의에선 통일부가 이번 회의에 남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려던 정대연씨 등 진보연대 소속 2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 저해 우려’를 들어 방북을 불허한 것을 “반통일적 행위”로 규정, 공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통신은 보도
- 통신은 “북·남·해외 위원장들은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해내·외에서 6.15 지지세력의 단합을 강화하고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회의에서는 외세의존과 사대매국 책동을 배격하고 통일문제, 민족내부 문제를 조선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소개

● 北매체, 민화협 관변단체화 기도 비난(3/28, 우리민족끼리)

-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새 대표 상임의장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가 선임된 것을 “민화협을 저들의 반통일 책동을 합리화하는 관변단체로 더욱더 전략시키고 동족 사이의 화해, 협력을 차단하려는” 기도라고 비난
- 매체는 남한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지원협력 사업에 대해 “부당한 간섭과 훼방을 일삼는 등 협력, 교류사업마저 대결적인



대북정책의 틀에 맞추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통일관련 정부 요직과 단체들에도 분열책동에 앞장서온 극우 보수분자들을 체계적으로 박아넣고 있다”고 주장

●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3/27, 연합)

- 유엔 인권이사회는 26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결의안을 채택
-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북한 인권결의문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과 함께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결의문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PR(보편적인 정례 인권 검토)에 북측의 참여를 촉구,
- 우리 정부는 2008년 3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찬성표만 던졌음. 그러나 2008년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표결에서는 작년에 비해 찬성국이 4개국 더 늘어났으며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반대

● 北대사, 못 산다고 우주개발도 못하나(3/27, 연합)

-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는 26일(이하 영국시간)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큰 나라들은 모두 쏘아올렸는데 우리가 쏘아올리는 것만 갖고 지역평화를 해친다고 몰아세우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그는 또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갖고 있다”고 언급
- 자 대사는 26일 밤 ‘앵글로 코리안 소사이어티’ 주최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우주개발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천영우 주영한국대사의 지적에 작심한 듯 북한의 논리를 주장
- 자 대사는 2000년대 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를 지냈으며 미국 통이자 건축 전문가로 알려짐.

● 민주조선, 인권문제 제기 수용납(3/27, 민주조선)

- 유엔 인권이사회가 26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를 한 가운데 민주조선은 27일 ‘모략 소동은 자멸을 촉진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한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남한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는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



를 더욱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주장

● **北측, 안보리 제재에 핵시험 대응 가능 시사(3/26,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의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수준의 카드를 내보였지만,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26일 제2차 핵시험 가능성까지 시사
- 조선신보는 ‘6자공약 준수여지 판별의 계기점,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안보리 논의’ 제목의 기사에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695호 -> 북한의 핵시험’으로 이어졌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망각한 제재소동이 되풀이될 경우 조선(북)의 초강경 대응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
- 이 신문은 추가 핵시험이라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2006년 “핵시험 자체가 그 3개월 전에 있었던 ‘통상적인 군사훈련 (미사일 발사)’을 문제시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사실상의 선전 포고’로 판단, 대응조치를 취하는 ‘자위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정책에 대한 문제시는 지난 시기보다 적대감의 도수가 높다”고 주장, 또 “2006년의 선례에 비춰볼 때 조선이 ‘2012년 구상’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결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군사적 억제력의 강화에 의거한 경제부흥의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
- 지난 24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해설성의 기사에서 이 신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다면 “그동안의 6자합의 이행 과정은 수포가 된다”며 “회담이 열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다”고 강조, 그동안 진행해 온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등을 원상복구하고 핵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
-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안보리 제재시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언급

● **美 여기자 보위사령부 초대소에 압송(3/24, 중앙일보)**

-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정보 소식통은 “여기자 2명이 현재 평양 근교의 보위사령부(북한의 정보 보안부대) 관할 초대소에 머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 이 소식통은 또 “함경북도 지역 북 중 국경을 넘어간 두 여기자는 관할 27국경경비여단 초병에게 체포됐다”며 “북한 보위사령부가 주도해 하루 만에 평양으로 압송해 입북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언, 그는 “북한 당국이 이들을 평양으로 하루 만



에 긴급 이송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 관계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커런트TV 소속 여기자인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이 북-중국경을 넘은 건 17일 오전 3시쯤이었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투먼시 외곽의 웨칭(月晴)이란 마을로 두만강 강폭이 좁고 민가가 드물어 몰래 이산가족을 만나거나 탈북자 은신처로 사용되는 곳이었음.
- 적발된 이들은 27경비여단 소속 초소본부로 끌려간 뒤 여권과 신분증을 통해 미국 국적임이 드러났으며 현장에 투입된 보위사령부 특수요원들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18일 오전 평양으로 두 여기자를 압송, 보위사는 여기자들이 소지했던 취재 녹화테이프나 카메라·취재수첩 등을 정밀 분석해 군사시설물 촬영을 포함한 군사 정탐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군부가 주도하는 보위사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국가안전보위부(북한 최고의 정보기관)로 넘겨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임.

● 北, 아이슬란드 대사에 리희철 임명(3/2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리희철 아이슬란드 주재 대사가 3월 17일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 북한은 아이슬란드와 1973년 7월27일 수교
- 리 대사는 2008년 4월 스웨덴 주재 대사에 임명된 뒤 라트비아(2008.10), 핀란드(2008.10), 리투아니아(2008.11), 노르웨이(2009.2) 대사도 맡은 데 이어 아이슬란드 대사도 겸임하게 된 것으로 보임.

● 北 불교도연맹 위원장 심상진으로 교체(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에 심상진 부위원장이 등용된 것으로 확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중국과 중국대북(대만)에서 진행되는 제2차 세계불교학술토론회에 참가할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불교도연맹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심상진 신임 위원장은 ‘심상련’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고 2005년부터 불교도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3월 8일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피선
- 그동안 조선불교도연맹은 유영선이 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작년 9월 말게부터 남북간 불교교류문제를 논의하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설이 있었음. 유 전 위원장은 교육성 국장이라는 모자를 쓰고 남북장관급회담



의 북측 대표단에 포함됐으며, 2004년엔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를 전담하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을 지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종교분야 간담회 북측 단장으로 참석하기도 해 통전부 부부장 기용 가능성이 커 보임.

● **노동신문, 30여년 역사 '3대혁명' 재강조(3/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북한의 최장기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춰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주장,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제기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맞춰 "지금이야말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 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
- 신문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가운데 특히 사상혁명과 관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미쳐날뛰는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혈통 강조(3/23, 조선중앙방송; 3/21, 통일신보)**

- 김정일 위원장의 조부 김형직이 "모든 반일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워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지도적 혁명조직"이었다고 북한이 선전하는 '조선국민회의'를 1917년 3월23일 결성한 기념일과 관련, 북한 매체들은 잇따라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혈통"을 강조
-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음악과 기사' 프로그램에서 김형직이 지었다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들려주며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녀이 어린 신념의 노래"라고 주장하고 "이 위대한 애국의 혈통으로 주체의 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 노래는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위업, 세계 자주화 위업을 기어이 실현해 갈 만경대 가문의 신념과 의지, 우리 인민의 불타는 마음을 담아 신고 영원히 울려갈 것"이라고 주장
- 21일에는 주간지 통일신보가 김정일 위원장이 10년전 자강도 현지 지도 당시 김형직, 김일성,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가문의 3대"를 언급하며 "만경대 가문이 대를 이어 개척하고 실현해 나가는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

● **北 위성발사는 경제강국 건설의 걸음(3/23, 조선신보)**

- 북한이 내달 4~8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선신보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우람찬 총진군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인공지구 위성 발사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귀중한 한걸음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기계설계부문 과학전시회 개최(3/27, 조선중앙통신)

- 제5차 기계설계부문 과학기술전시회가 24-27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美, 대북 식량선적 중단은 영양조사 불허가 이유(3/26,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가 2008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다가 2008년 9월 이래 세계식량계획(WFP)이 분배하는 식량의 선적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당초 합의와 달리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영양실태조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의 존 브라우스 북한담당관이 밝혔다.
- 브라우스 담당관은 북한이 식량배급을 감독할 한국어 구사 요원의 증원을 거부한 점도 있지만 영양 실태조사 거부가 미국 정부에 가장 큰 우려를 안겼다고 언급, 그는 미국의 대외원조법상 지원대상 국가에 인도주의적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가에서 영양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설명
- 그는 북한이 식량지원과 관련한 북-미간 합의를 이행할 경우 미국은 곧바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 군사 관련

● 北,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준비(3/29, 산케이 신문)

- 산케이(産經)신문은 29일 '인공위성'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이와는 별도로 원산 부근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북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이 같은 별도의 미사일 발사 계획이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정찰위성 등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로켓 발사 직후 실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

● 北, 발사대에 대포동 2호 장착(3/25, 조선일보)

-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북한의 대포동2호 로켓(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 발사가 4월 초로 예고된 가운데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시험장의 발사대에 대포동2호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미 정보당국은 예상보다 발사대 장착이 앞당겨짐에 따라 실제 발사도 예고 시점(4월 4~8일)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이 이번에 장착한 로켓이 지난 2006년 발사된 대포동2호 미사



일과 같은 형태인지, 길이 등 크기가 커진 개량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길이 33~35? 내외의 3단 로켓 형태인 것으로 전해짐. 이번에 발사될 대포동2호의 최대 사정거리는 미 알래스카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7000~8000km로 추정, 북한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대포동2호 1단계 로켓이 무수단리 시험장에서 650km 떨어진 동해상에, 2단계 로켓이 3600km 떨어진 태평양상에 각각 낙하할 것이라고 통보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4월 개학 준비 한창(3/21, 민주조선; 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4월 1일 새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 조선중앙통신은 3월 26일 내달 개학을 앞두고 교육기관들에서 새 학년도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강 작성을 이미 끝낸 데 이어 실험·실습과 실물교육을 위해 “현대적인 과학설비와 기구들을 보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
- 또 민주조선 21일자는 “새 학년도 준비를 실속있게 하는 것은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라며 빈틈없는 개학 준비를 강조, 신문은 “새 학년도 준비에서 기본은 교육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원들이 교수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 강습을 비롯하여 그들의 실무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직지도 사업을 잘 짜고 들어야 한다”고 주문, 교원의 자질 향상을 강조
- * 북한은 1996년부터 새 학년도 개학일을 9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꾸었으며, 3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정해 교재 준비와 교과과정 점검, 교과서와 학용품 공급 등 개학 준비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음.

● 北TV, WBC 간략히 언급(3/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9일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관련, 미국과 베네수엘라 경기를 짧막하게 보도하는 형식으로 소개, 방송은 WBC에 대해 “세계 1류급 야구경기대회”라고 언급했으나 WBC의 자세한 연혁이나 참가국 현황, 최종 경기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세계결핵의 날 기념행사(3/27, 조선중앙통신)

- ‘세계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위생강연과 사진전시회 등 관련 행사가 열렸으며, 북한 각지에서는 ‘결핵전파를 막는 것은 바로 나라’라는 주제로 다양한 홍보활동이 벌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北음식점의 변화(3/26, 조선신보)**

 - 북한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전문식당인 월향각이 손님들 앞에서 직접 오리를 구워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소개, 월향각은 최근 “자동회전대에서 오리를 구워내는 장치”인 통오리구이로를 구입했는데 이 구이로는 표면이 유리로 돼 있어 오리의 조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리성숙(50) 지배인은 “손님들은 자기가 원자재를 선택하고 자기 눈 앞에서 조리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을 재미로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

- **北김책공대 전자도서관 이용자 매년 2배 증가(3/24, 노동신문; 3/2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첫 전자도서관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이 2006년초 개관한 이래 이용자 수가 연인원 53만7천여 명에 이른다고 노동신문이 소개
 - 신문은 24일자에서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의 “독자 수는 해마다 두배 이상 증가돼 하루 최고 8천여 명”의 교수, 학자, 학생들이 이용하며 개관 이후 “각종 봉사를 받은 독자 수는 연 53만7천여명”이라고 밝혔다

- **AI방역, 항구적 사업으로 추진(3/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소개
 - 통신은 국가비상방역위원회가 조직된 후 AI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전 국가적, 전 균중적인 사업”으로 방역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AI 예방을 위해 “겨울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에 조사구역을 선정”해 “새들의 종류와 이동, 서식 등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설명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과학원 세포·유전자공학분원은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AI바이러스의 아형(亞形)을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신속감별법을 찾았고,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의 AI 신속 진단기술 개발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
 - 북한은 AI 예방사업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긴밀한 협조 밑에 적극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통신은 강조

- **北함북도, ‘꽃제비’들 농장에 배치(제271호, 오늘의 북한소식; 3/25, 연합)**

 - ‘오늘의 북한소식’은 최근호(제271호)에서 소식통을 인용, 회령시가 2007년 청진시 여행자집결소에 구류했던 꽃제비 70여명을 최근 영수리농장과 궁심리농장에 각각 배치했다고 말하고, ‘농장 청년독립분조’로 불리는 이들은 “합숙생활이 기본이고, 식사는 각 일꾼(간



부)들이 각출해서 보장”하지만 매일 작업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완수할 때까지 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 간혹 밤 10시가 넘어도 과제를 다 할 때까지 숙소에 안 보낼 때도 있으며, 개인별로 하루 단위로 노동 과업을 부과하는 ‘개인 도급제’를 실시한다는 것

- 이들 꽃제비 대다수는 2007년 봄 춘궁기에 부모·형제를 잃은 도시 출신의 고아들로 한 농장 간부는 “다른 농장들도 이런 아이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2007년과 2008년에 집결소에 붙잡혔던 아이들 중 16살이 넘는 아이들을 농장에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전언

● 北창광거리 식당들 통신망 연결(3/24,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 창광거리에 밀집한 음식점 18곳에 대한 개건(개조) 공사의 일환으로 이들 식당을 정보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
- 이들 식당을 관리·운영하는 창광봉사관리국은 “모든 식당들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설비들을 갖추기로 하고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도입하는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신문은 설명, 개건 공사는 2008년 4월 시작돼 현재 80% 진행됐으며 식당 건물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고 내·외부의 장식 미장, 주방의 신축과 축조, 상하수도망 공사, 거리에 잔디를 새로 심고 도로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 등을 실시
- 창광거리에는 창광산국수집, 서양요리집, 무지개식당 등 18개 식당이 있으며, 전통요리 외에도 중국 요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
- 창광봉사관리국의 류영희(45) 처장은 “이번 개건 사업을 단순히 건물이나 상·하수도망을 새로 고치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며 개조 공사를 음식점의 서비스와 경영 방식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설명, 이에 따라 식당 종업원들은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무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손님들에게 선보이게 될 “봉사복의 개작도 이들의 몫”이라고 신문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러, 위성이면 안보리결의 무관, 美에 통보(3/28,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게 인공위성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이 쏘려는 발사체가 위성이라면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쏘려는 것이 미사일이든, 위성 이든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발사 원리가 같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한·미·일의 해석과 다른 것임.

● **中, 6자 각국 절제·냉정 유지해야(3/26, 연합)**

-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했다는 보도와 관련, “각국이 절제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사실을 중국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 확인은 하지 않은 채 “우리도 관련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언급
- 친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중국이 유엔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중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관 당사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

● **北, 안보리 상정하면 6자회담 없어질 것(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6일 장거리로켓(북한은 인공위성 주장)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 성명 등 낮은 수준의 조치나 북한 관련 논의를 상정만 해도 6자회담이 없어지고 핵 불능화도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밝힘.
- 북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문답에서 “유엔 안보리가 의장 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북한)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고 언급
- 이어 “이런 적대행위로 인해 (북핵 폐기를 위한 절차가 명시한) 9·19 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해 지금까지 진척돼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나. 북·미 관계

● **美, 北 미사일 요격 않을 것(3/29, 폭스뉴스 선데이)**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그것(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이 지금 당장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



착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

- 게이츠 장관은 “만일 어떤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하고 있거나, 하와 이 등지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그러한(요격)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라고 답변

● 보즈워스, 김정일 만나고 싶다(3/28, 워싱턴 포스트)

- 스티븐 보즈워스는 28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상 적으로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과 만나고 싶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외무성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싶다”고 언급
- 특히 그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 “나는 6자회담을 매일 대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정책 이슈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양자협상’을 언급하기도 함. 그는 또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 “우리는 거래(deal)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략적 긴급성이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두 동맹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美정보국장, 北, ICBM능력 과시 의도(3/27, 연합뉴스)

- 데니스 블레이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앓은 뇌졸중에서 회복된 뒤 굳건히 권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위성 발사 계획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

● 클린턴, 北 미사일 발사시 유엔 회부(3/26,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이 문제를 유엔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25일 경고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 서 이 같은 도발적인 행동이 간과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

● 美, 北로켓 대응 이지스함 2척 배치(3/26, AFP 통신)

- 미국 해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일본앞 해상에 배치했다고 26일 밝힘. 미 해군



의 공보장교인 찰스 하워드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사일을 탐지, 파괴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인 매케인호와 채피호가 25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항을 떠났다면서 “우리는 어떤 긴급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언급

● **美, 北은 두 여기자 잘 대해준다고 확인(3/24, 미 국무부)**

- 북한은 억류중인 두 명의 미국인 여기자들을 잘 대해주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영사보호를 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레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보호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그들에게 영사접근을 제공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히고 “북한은 미국 정부에게 억류자들을 잘 대해줄 것을 확인했다”고 전언
- 우드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언급은 스웨덴 대사관이 아닌 북한으로부터 직접 전달된 것임을 밝혔으며,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긴박하게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
- 그는 이와 함께 “6자회담은 아주 유용한 틀이며, 북한이 우리와 함께 더 진전할 수 있기 위해 6자회담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

● **美, 북한 주민 9만명 인적관리(3/25, 조선일보)**

- 미국이 식량구호단체 등을 통해 북한 주민 9만여 명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으며, 최근까지 대북 지원 식량의 현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자료를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24일 알려짐.
-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탈북도 못해 북한 주민 200만~300만명이 굶어 죽었지만, 2000년대 초 2차 식량 위기가 닥치자 10만 명 이상이 중국으로 탈출해 구걸하거나 풀뿌리를 캐며 연명, 미국 구호단체 관계자는 “당시 소문을 듣고 북-중 국경 지역에 가보니 탈북자들이 수백 명씩 무리를 지어 야산(野山) 등에 숨어 있더라”고 언급하고 이들 단체는 그때부터 25kg의 쌀과 약품 등이 담긴 ‘배낭(구호품 키트)’을 준비해 탈북자들에게 나눠줬으며 “식량 배낭을 나눠주면서 탈북자들의 이름·주소·가족·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기록했는데 약 9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배낭을 받은 뒤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갔다”고 설명
- 그는 “(구호단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 9만여 명의 인적 정보를 미 국무부에 빠짐없이 넘겼다”고 밝힘.
-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미국측 식량 분배 모니터링(Monitoring·감시) 요원의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방침 이라면서 “우리나라 영역 내에 낙하하는 케이스는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
- 파괴조치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静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PAC3)을 28일 육상자위대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등 두 기지로 이동할 방침이며 수도권 경계를 위해 도쿄(東京) 방위성 본부와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주둔지 등에도 배치할 예정임.
- 또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 초카이호(모두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기지 배치 중)를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 기지 배치중)를 태평양에 각각 배치함.

바. 기타외교 관계

● 정부경제대표단 베트남 방문(3/28, 조선중앙방송)

-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경제대표단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EU, 北 로켓발사 유엔결의 훼손 경고(3/24, 연합)

- 유럽연합(EU)은 북한 당국에 ‘실험적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24일 발표,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 정부는 이날 ‘트로이카(의장국·집행위·이사회 사무국)’ 국·과장급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 북한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 이 회동에서 EU 트로이카는 “북한이 발표한 실험적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체코 정부는 설명
- 체코 정부에 따르면 이리 슈틀레르 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한 EU 트로이카 대표단은 3월 21~23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양자 관계, 인권 및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논의

3. 대남정세

● 남북교류협력 행정절차 간소화(3/27, 연합)

- 개성공단 사업 등과 관련해 남북을 수시로 오가는 우리 국민들은 오는 7월31일부터 방북 때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는 번거로움을 겪



지 않아도 됨.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예고

-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에 의해 최장 1년의 수시 방문 기간을 보장받은 남북협력 사업자는 수시방문 기간 별도의 방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됨.
- 또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에 참석한 계기에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와 당국간 합의에 따른 행사나 국제행사 참석을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개정안은 개성공단 등 특구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총 투자금액 50만 달러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으며 북한 방문 등과 관련한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
-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3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시행

● 한국YMCA, 北行콩기름 400캔 인천서 선적(3/27, 연합)

- 한국YMCA는 27일 인천항 1부두에서 콩기름 400캔(개당 18ℓ)을 북한에 보내는 선적식을 가짐. 한국YMCA 관계자는 “이 콩기름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부족하기 쉬운 지방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콩기름은 캔에 담겨 인천~남포 정기화물선인 트레이드포춘호(4천500t)을 통해 28일 정오께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앞으로 보내질 예정

● 통일부, 北미사일 상황대책반 가동(3/27, 연합)

- 통일부는 2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상황대책반’을 가동, 김천식 통일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황대책반은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발사 예고 기간 민간인 방북 및 북한 체류 인원 등 왕래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게 됨.

● 개성공단 통행 정상화국면(3/23, 연합)

- 북한이 23일 우리 측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기간(3.9~20) 차단과 정상화를 반복한 남북간 통행이 일단 정상화 국면으로 돌아감.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8시30분께 북측이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자 우리 측 방북 및 귀환 계획(방북 640명, 귀환 261명)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오전 9시와 10시 두 차례의 출경(방북)이 있었고 이 출경은 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언급
-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군통신선도 재개통됐고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으로는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9일 이후 출입경 상황이 계속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9일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부내) 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언급

● 통일부, 민간단체 방북 정상화(3/23, 통일부)

-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인 3월 9~20일 북한의 통행차단 등으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뤄졌던 민간단체들의 방북이 21일부터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발표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9일 이후 군통신선이 차단되고 개성지역 출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평양이나 사리원, 남포 등지로 방북하는 민간단체들의 방북일정도 조정됐는데 이런 일정들이 2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미사일

● 게이츠 “美, 北 미사일 요격 않을 것”(3/29)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이 지금 당장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게이츠 장관은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 로켓 발사시 요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하와이를 향하고 있거나 하와이 등지를 향한 것처럼 보이는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요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는 그런(요격)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 앞서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군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만 있으면 이를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9일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평화적인 위성에 대한 요격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해 왔음.
-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그것과 관련해 어떤 것을 할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이어 “미국은 이번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사거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갖는 것이 북한의 “장기적 의도”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당장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데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 “北,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준비”<산케이>(3/29)

- 일본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로켓 발사와는 별도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일본의 극우세력 대변지인 산케이(産經)신문은 29일 ‘인공위성’ 명목으로



-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이와는 별도로 원산 부근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북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이같은 별도의 미사일 발사 계획이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정찰위성 등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로켓 발사 직후 실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 신문은 원산이 로켓 발사가 계획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곳으로, 한국과 일본의 대도시권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특히 경계를 강화하면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또한 북한이 장거리에 이어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할 경우, 이는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 완전포기’를 촉구한 2006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라는 자신들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즈워스 “김정일 만나고 싶다”(3/29)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및 북한 고위층과의 면담 희망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며 대북 대화 의지를 거듭 엿보였음. 그는 28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상적으로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과 만나고 싶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외무성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싶다”고 말했음. 특히 그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 “나는 6자회담을 매일 대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정책 이슈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양자협상’을 언급하기도 했음.
- 그는 또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 “우리는 거래(deal)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략적 긴급성이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두 동맹국(한국, 일본)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확실히 쉽지 않는 일이다”고 말했음.

● 한미일, 北로켓 발사시 안보리회부(3/28)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쇄 회담을 열어 다음 달로 예고된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 및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 3국은 이날 협의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하다는데 사실상 인식을 함께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6자회담 미국측 수



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와 관련 협의를 했음. 위 본부장은 협의 뒤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 “안보리에서의 대응, 또 (6자) 회담 재개에 관한 대응 등을 협의했다”고 언급,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음.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이날 저녁 만찬을 겸한 비공개 한·미·일 3자회담이 끝난 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즉각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키로 확인했다고 밝혔음. 그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우리는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 점에 대해 (3국간에) 차이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한편 위 본부장은 이날 협의에 이어 30~31일 이틀 동안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지들과도 연쇄 접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中, 日에 ‘北로켓’ 냉정대응 요청”(3/28)

-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7일 열린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일본 외무심의관과의 차관급 안보대화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일본이 냉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8일 전했다.
- 신문은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중국 측은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북핵 6자회담에 북한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중국 측이 일본 측에 냉정한 대응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음. 그러나 두 사람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인 만큼 북한이 자제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 日 이지스함, 동해·태평양 출항..요격준비 돌입(3/28)

-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발사 예정인 로켓 등이 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림에 따라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곤고와 초카이가 28일 오전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기지에서 동해로 출항했음. 또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기리시마도 이날 오전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기지를 출발해 태평양으로 향했음. 이들 함정은 30일까지 동해와 태평양 주변에서 미 해군 이지스함 등과 연대, 북한이 4월 4~8일 사이에 실시키로 국제해사기구(IMO)에 통고한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함.
- 자위대는 ‘인공위성’이 당초 통고한 궤도를 벗어나 일본에 낙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편 등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것으로 보일 때는 방위상의 파괴조치 명령에 따라 즉각 미사일방어(MD)체제를 가동, 요격에 나서게 됨.

- 곤고와 초카이는 미사일 탄두 부분이나 파편 등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함정에 탑재된 SM3를 이용해 요격하며, 기리시마호는 미사일의 항적(航跡)을 포착해 탄도 분석 및 낙하 지점 예상 등의 작업을 하게 됨.

● 러 “위성이면 안보리결의 무관” 美에 통보<RFA>(3/28)

-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게 인공위성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이 쏘려는 발사체가 위성이라면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쏘려는 것이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발사 원리가 같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한·미·일의 해석과 달라 향후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北에 로켓 발사 자제 요청(3/27)

-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발사 자제를 요청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이 러시아 외무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27일 보도.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로켓 발사를 자제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 당국자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자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 보로다브킨 차관은 또 “모든 이해 당사국들은 (로켓 발사에 대해) 동요나 상호 위협 없이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日, 北로켓 파괴조치 명령 발동(3/27)

-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이회의 결정을 거쳐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했음. 일본이 미사일 파괴 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
-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자위대에 파



괴조치 명령을 내린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만전을 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공위성’이라면 높은 고도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영토 상공을 날아서 발사되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면서 “(요격에 대비해)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가능하다는 데는) 의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우리나라 영역 내에 낙하하는 케이스는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 파괴조치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히라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PAC3)을 28일 육상자위대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등 두 기지로 이동할 방침임. 수도권 경계를 위해 도쿄(東京) 방위성 본부와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주둔지 등에도 배치할 예정.
- 또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 초카이호(모두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기지 배치중)를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 기지 배치중)를 태평양에 각각 배치함.
- 지난 25일 북한이 로켓 발사대에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당초 통고(4월 4~8일중)한 대로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당초 파괴조치 명령에 대해 “전 부처가 하나가 돼 대응해야 한다” 보고 각료회의 결정을 요구하는 방위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외무성과 내각관방 일각에서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이의 제기가 나옴에 따라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하마다 방위상이 명령을 내리는 절충안을 마련함.

● <日, 北로켓 요격 어떻게 이뤄지나>(3/27)

-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로켓 발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 영역 침범시의 요격 명령을 발령,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함께 일본의 요격 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에서 영역 침범시의 요격 방침을 정한 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자위대에 대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즉각 파괴하라는 명령을 하달함.
- 이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상 요격용 미사일인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북한 로켓이 상공을 통과하는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현의 자위대 기지로 이동하기로 함.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수도권 3곳에도 PAC3를 배치하는 한편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동해상에,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



착하는 이지스함 1척을 태평양에 각각 배치하는 등 만반의 요격 태세를 갖추고 있음.

- 일본은 북한의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된 로켓이 만의 하나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에 한해 요격에 나선다는 방침임.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한 대로 로켓이 대기권 밖 상공을 통과, 정해진 궤도로 날아 정해진 곳에 떨어질 경우에는 국제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요격이 불가능함.

● 美의원, ‘北 적대행위 중단’ 결의안 추진(3/27)

-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 및 북한 핵무기·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26일 한인공공정책위원회(KAPAC. 회장 이철우)에 따르면 피터 킹(공화,뉴욕) 의원은 이 같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 법사위원회의 법안 검토와 공동발의 의원 서명작업을 마치는 대로 하원 외교위에 발의할 계획임.
-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핵확산 의혹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또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의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조속 복귀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 결의안 준수를 촉구함.
- 결의안 초안은 이어 미국은 남북 대화와 협력의 증진을 위해 계속 나설 것이라면서 미 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에 있어 한·미간 강력한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강조함. 이번 결의안 추진과 관련, 한인공공정책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의 도발행위 중단과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힘.
- 위원회의 이철우 회장은 미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한국 정부가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美정보국장 “北,ICBM능력 과시 의도”(3/27)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블레어 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위성 발사를 통해 ICBM 능력을 과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앓은 뇌졸중에서 회복된 뒤 굳건히 권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 그는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위성 발사 계획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함. 북한은 다음 달 4~8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밝힌 상태로 현재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의결(3/27)

- 유엔 인권이사회는 26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9개항의 권고사항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을 다수결로 채택함.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47개 이사국 대표들이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통과됨. 우리 정부는 작년 3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졌지만, 같은 해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 이날 표결에서는 작년에 비해 찬성국이 4개국 더 늘어났으며,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반대함.
- 이번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위반행위들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들과 아직 풀리지 않은 외국인 납치 의혹들에 깊은 우려를 갖고서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하고 정치범과 송환된 탈북자들에게 대한 인권 남용을 개탄함. 결의안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함. 또한 북한에게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포함한 전면적인 협조를 촉구함. 이와 함께 결의안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PR(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 북측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함.
- 특히 결의안은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리에 따라 필요를 바탕으로 전달된 인도적 지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신속하며, 제한없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임. 앞서 외교통상부는 공동제안국 참여 배경에 대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과 작년 유엔총회에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힘.

● 러' 외무 “北로켓 선부른 판단은 금물”(3/26)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관련국들의 신중한 자세를 재차 촉구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모스크바에서 카드르백



사르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무장관과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계획 중인 로켓 발사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함.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북한의 로켓 발사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선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이렇듯 저러쿵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함.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힘.

- 로그비노프 특사는 당시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오는 4월 초에 있을 북한 위성 발사의 모든 상황을 신중히 살펴 공황상태로 빠져드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함. 그런가 하면 러시아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 위성 탑재) 로켓이 러시아와 가깝게 혹은 러시아 영토 위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과 영공감시망을 가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사고 시 로켓이 러시아 섬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기술력을 동원해 북한 로켓의 궤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北 “안보리 상정만 해도 6자회담 없다”(3/26)

- 북한 외무성은 26일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 후 이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지기만 해도 북핵 6자회담을 거부하고 그동안 진행돼온 핵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문답에서 “안보리가 의장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고 주장함.
- “이러한 적대행위로 인하여 9.19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대변인은 말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되어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미사일 발사나 제2차 핵시험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임.
- 이와 관련,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695호→북한의 핵시험’으로 이어졌던 2006년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망각한 제재소동이 되풀이될 경우 조선(북)의 초강경 대응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해 핵시험 가능성을 시사함.
- 이 신문은 ‘6자공약 준수 의지 판별의 계기점,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안보리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추가 핵시험을 명시하지는 않



았지만 북한의 2006년 “핵시험 자체가 그 3개월전에 있었던 ‘통상적인 군사훈련(미사일 발사)’을 문제시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판단, 대응조치를 취하는 ‘자위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정책에 대한 문제시는 지난 시기보다 적대감의 도수가 높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2006년의 선례에 비춰볼 때 조선이 ‘2012년 구상’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결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군사적 억제력의 강화에 의거한 경제부흥의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덧붙임. 신문은 이와 함께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다면 “그동안의 6자합의 이행과정은 수포가 된다”며 “회답이 열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다”고 강조함으로써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핵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함.
- 북한측의 이같은 강경입장 표명은 한·미·일 등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최소한 안보리 상정·논의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경고인 동시에 자신들의 우방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측에 안보리 논의에 반대해줄 것을 우회 요구한 것으로 보임. 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관련 당사국이 절제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상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문답에서 자신의 24일 담화에 대해 “지금 일부 보도수단들은 안보리의 적대행위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나 결의 채택과 같은 도수높은 조치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하면서도 그 후과(결과)는 피하고 넘어가려는 적대세력의 어리석은 잔꾀”라고 주장함.
- 그는 24일 담화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배치된다”며 “이러한 적대행위가 안보리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안보리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어 그는 “9.19공동성명이 파괴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며 6자회담 거부 방침을 시사함.

● 美, 北로켓 대응 이지스함 2척 배치(3/26)

- 미국 해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일본앞 해상에 배치했다고 26일 밝힘. 미 해군의 공보장교인 찰스 하워드씨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사일을 탐지, 파괴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인 매케인호와 채피호가 25일 일



본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항을 떠났다면서 “우리는 어떤 긴급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함.

- 하워드는 또 다른 이지스함인 스테덤호도 26일 아오모리(靑森)현 아오모리항을 출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디로 향할지는 밝히지 않음. 한편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함에 따라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동해상에 급파할 예정이고 일본 역시 이지스함인 곤고호와 죠카이호를 사세보항에 대기시키는 등 모두 5척의 한·미·일 이지스함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하고 있음.

● 中 “6자각국 절제·냉정 유지해야”(3/26)

-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했다는 보도와 관련, “각국이 절제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사실을 중국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 확인은 하지 않은 채 “우리도 관련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말함. 친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당사국이 절제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외교 소식통들은 이 발언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 달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친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중국이 유엔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채 “중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관 당사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함.

● “北로켓 제재시 2차핵실험 가능”<전CIA간부>(3/26)

-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아시아지부장을 역임한 아트 브라운 씨는 26일 북한은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브라운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이미 많은 제재가 이뤄진 상태에서 추가 제재의 효과는 미지수”라며 “특히 북한은 제재가 취해지면 2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의 반응이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핵실험을 감행해 미국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함. 브라운 씨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과 관련,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한국의 (대북)입장이 불분명하면 독자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특히 이번에 발사되는 장거리 로켓이 성공한다면 이론적으로 미국을 사정권에 넣기 때문에 미국은 독자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지적함.



- 브라운 씨는 “북한은 한·미관계를 교란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과 단독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그는 조언함. 브라운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야 할 시기”라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대북문제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고 말함. 그는 “미국은 북한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사건이 벌어지면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만 사건이 없을 때는 북한 문제를 제쳐놓는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린다면 6자회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함. 브라운 씨는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 중 한국이 대북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지금은 양쪽 모두 새 대통령이 취임했고 새로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북한의 로켓과 관련, “발사 준비작업이 이뤄지는 대포동 2호의 1단 로켓은 노동미사일의 엔진을 5~6개 합친 것”이라며 “1단계 로켓이 같은 속도로 연소한다면 발사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브라운 씨는 “북한이 1998년 발사한 인공위성(광명성1호)은 거의 성공에 근접했으나 미국은 발사 사흘 뒤에야 인공위성인지를 파악했다”면서 “북한은 당시 기술을 이란과 협력을 통해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미국의 로켓 요격 가능성에 대해 그는 “요격 대상 미사일이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를 아는 상황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도 확률은 50~60%에 불과하다”며 “결프전 때도 10% 요격 성공에 그쳤다. 미사일 요격은 매우 어려운 임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 브라운 씨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CIA 아시아 지부장과 한국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25년간 CIA에서 근무했으며 백악관과 의회 인사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짐.

● <北,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 돌입>(3/26)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예정보다 나흘 앞서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확인돼 발사일을 앞당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6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로켓은 지난 24일 오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서 모습을 드러냈음. 이는 28일께 발사대에 장착될 것이란 예상보다 나흘이나 앞선 것임.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되면 실제 발사까지 연료주입 과정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발사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발사일 빨라지나 =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는 3~4일이 소요됨. 실제 북한은 2006년 7월5일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에 3~4일 전에 연료주입 작업을 마칩. 북한이 지금 로켓에 연료주입 작업을 시작한다면 기술적으로 28~29일 사이 충분히 발사할 수 있다는 계산임.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언론은 다음 달 4~8일로 예고된 발사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일정을 지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발사 후 30분이면 실체확인 = 북한의 로켓이 발사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거리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현재 발사대에 있는 로켓의 상단부분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한·미 첩보당국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이 로켓 상단부분을 덮개로 가려놓은 것은 추적을 회피하거나 비와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하와이까지 날아갈까 = 북한이 발사할 로켓의 비행거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로켓이 낙하 위험지역으로 선포된 곳까지 날아간다면 인공위성 궤도 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장거리 로켓 개발 수준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험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동해상과 태평양 해상의 좌표를 거리로 환산하면 발사장으로부터 각각 650여km, 3천600여km 떨어진 곳임.
-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발사된 3단 로켓으로 이뤄진 발사체의 1단은 650여km 동해상으로, 2단은 3천600여km의 태평양 해상에 각각 낙하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임. 마지막 3단 로켓은 대기권 밖에서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킬 때 사용됨. 북한이 제시한 위험지역은 미드웨이제도 서쪽 북태평양 인근으로 하와이에서 1천km 떨어진 곳임. 사거리를 좀 더 연장한다면 하와이 제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이 때문에 미국은 로켓의 비행거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북한은 이미 사거리 3천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 6천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일본과 미국이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요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일본과 미국은 대기권을 벗어난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상에 각각 2척씩 배치해 놓고 있음.

● “北 로켓 장착”..美日 강력대응 경고(3/26)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유엔 차원의 제재 방침을 밝히고 일본이 미사일 요격명령을 하달키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 NBC방송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의 발사대에 장착했다고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함. 미 관리들에 따르면 현재 2단계까지



만 구성된 미사일이 목격되고 있으며, 탄두나 인공위성이 실릴 로켓 상당 부분은 덮개로 가려져 있는 것으로 전해짐. NBC 방송은 발사 자체는 수일 내에도 이뤄질 수 있는 상태라고 전함. 일본 교도통신도 북한이 대포동 2호로 여겨지는 탄도미사일을 무수단리의 발사대에 장착했다고 미.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6일 긴급 타전함.

-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멕시코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유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이같은 도발적인 행동이 간과되지 않을 것이며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함.

● “日, 北로켓 대비 PAC3 5곳 배치”<산케이>(3/26)

-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관련, 오는 30일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수도권 3곳과 도호쿠(東北) 지역 2곳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아울러 일본은 이들 두 지역에 각 1개의 요격 통제 지휘소를 설치해 운용키로 함.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의한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임. 일본의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의한 미사일 요격은 2단계로 구성됨. 우선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배치된 요격미사일(SM3)이 대기권 밖의 미사일을 요격하며, 여기서 실패할 경우엔 항공자위대의 PAC3가 낙하 직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임.
- PAC3의 요격 범위는 반경 20km로 좁음. 현재 도호쿠 지역에는 배치되지 않았지만 발사기 등이 차량 탑재형이어서 이동이 가능,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맞춰 일시 배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산케이는 북한이 25일 격납고에서 미사일을 발사대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26일 중에는 미사일을 발사대에 설치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미사일을 발사대에 설치한 뒤에는 연료주입 작업만 남았다며 이 작업은 5~7일 걸린다는 시각이 있지만 주입 작업 자체는 몇시간이면 끝난다는 말도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신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설치한 무수단리 기지에는 발사대 부근 지하에 액체연료 주입 시설이 신설됐다는 정보도 있다면서 이 정보가 사실일 경우엔 정찰위성이 연료주입 상황을 파악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미사일 발사대 장착”(3/26)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했다고 미국과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함. 미국 N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의 발사대에 장착했다고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전함. 미 관리들에 따르면 현재 2단계까지만 구성된 미사일이 목격되고 있으며, 탄두나 인공위성이 실릴 로켓 상단 부분은 덮개로 가려져 있는 것으로 전해짐. 방송은 발사 자체는 수일 내에도 이뤄질 수 있는 상태라고 전함. 일본 교도통신도 북한이 대포동 2호로 여겨지는 탄도미사일을 무수단리의 발사대에 장착했다고 미·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새벽 긴급 타전함.

- 한·미·일 3국은 이번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 발사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음. 북한은 국제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4~8일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으며, 같은 기간 2개 항로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임.
- 북한은 또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할 경우 북핵 6자회담에 불참할 뜻을 시사함. 북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며 “9.19 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함.

● 샤프 “北, 정권생존·협상력 강화 시도”(3/25)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4일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에 대해 “정권생존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힘. 샤프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은 동북아 안정과 안보에 주요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함.
- 그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의 주요 공급국을 유지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의 주요 확산국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대포, 탄도미사일 및 휴전선과 매우 인접한 곳에 모두 배치된 특수부대들에 의한 위협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특히 “북한 내에서 정권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김정일이 이미 밝힌 대로 다음 달 4~8일 사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대포동 2호 발사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도발에 의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와 관련,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을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 영토와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책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기밀이라면서 언급을 피하면서 “일본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함.
- 한편 샤프 사령관은 “정권 생존은 김정일의 첫 번째 관심사이고, 어



는 정도는 그의 유일한 관심사”라면서 “그가 정권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함. 그는 또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 정권의 김정일과 선군정책을 하려는 절대적인 욕망”이라면서 “주민들은 돌보지 않고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는 그(김정일)의 의지”라고 지적함. 이밖에 그는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와 관련, “전작권 이양은 정말 매우 잘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면서 “전작권 이양은 동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2012년 이양 불변 방침을 강조함.

● <北 ‘6자불참’ 시사..5자대응 ‘주목’>(3/25)

- 북한이 로켓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정이 나온다면 6자 회담에 불참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나머지 5개 참가국의 대응이 주목됨.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자는 모두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6자회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로켓발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 보임.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에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임.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6자 차원은 물론 유엔 차원의 제재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 정부내에도 최근에는 제재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분위기가 감지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5일 한·중 6자수석대표 회담을 마치고 귀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꼭 제재라고만 단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제재 가능성에 무게를 실지는 않았음.
- 다른 정부 당국자도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됐든 각국의 개별적 제재가 됐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함.

● “北 ‘위성’ 발사, 내부적으로 이익”<제인스>(3/24)

- 북한이 다음 달 실시하겠다고 밝힌 통신위성 발사가 내부적으로는 이득이 되겠지만 국제적 제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적 군사컨설팅 업체 제인스(Jane's)가 23일 진단함. 제인스는 자체에서 발간한 잡지 ‘인텔리전스 리뷰’에서 북한이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SLV)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위성사진을 예증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내부적으로 국가적 자존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함.
- 제인스는 북한이 은하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 3월 8일 있었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이어 국가적 자존심을 쌓아 올리게 돼 평양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함. 제인스는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이끌 수도 있다고 경고함. 북핵 관련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실제적으로는 이론상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제인스는 잡지를 통해 북한이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 발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함. 이 사진은 지난 16일 촬영된 것으로 제인스는 지난달에 찍힌 사진과 비교한 결과 기중기가 발사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면서는 발사대 위에 우주발사체를 장착하는 단계의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 “北미사일에 과잉대응해선 안돼” <자누지> (3/24)

- 북한의 로켓 발사 예정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시에 대해 미국이 과잉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전문위원에 의해 23일 제기됨.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지낸 자누지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2009 아시아 의회 시각’이라는 세미나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미사일 요격이나 발사대에서 미사일 제거, 6자회담 중단 및 폐기 등과 같은 과잉대응을 하면 안 된다”며 북미 미사일 협상 재개 등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주문함.
- 그는 “북한이 클린턴 전 행정부 말기에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노리고 있을 수 있고 북한은 당시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10억달러를 매년 받고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6자회담에 포함시키길 원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킴. 자누지는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는다면 이를 요격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계속 배치하거나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지적함.
- 그동안 대북 제재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며 제재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핵 제조를 못 하게 하는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 게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임. 자누지는 대북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들의 일치된 대응이라고 강조함. 이어 버락 오바마 후보는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북한의 4월 미사일 발사 실험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를 보여주는 암시가 될 것이라고 자누지는 전망함. 하지만, 자누지는 북한의 핵야욕 포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북한에 핵은 생존과 안보에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함.



● <中 전문가들은 北로켓발사 어떻게 보나> (3/23)

- 북한이 발표한 광명성 2호 발사일이 약 2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도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이를 멈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3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북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숨은 카드를 내보이도록 재촉하기 위해 이번 로켓 발사 시도를 강행하는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은 자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됨으로써 북-미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고 말함.
- 다음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환구시보에 밝힌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에 대한 논평임. ▲양보장(楊伯江)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동북아연구실 주임 = 중국은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입장임.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왔지만 북한이나 한·미·일의 어느 측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평을 하지 않음. 한반도 문제는 매우 까다로워서 어느 한 측에만 의지해서는 해결할 수 없음.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에선 북한 문제가 긴급한 외교현안이 아니고 새로운 대북 정책 결정 여부는 공화 양당의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새 대북 정책은 1년 정도 걸려야 나올 것임. 여기에다 한반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해 당사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기 어려움.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읽고 로켓 발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새로운 북한 정책을 수립할 때 북한을 중시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임. ▲스인홍(時殷弘) 중국인민대국제관계학원 교수 =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요격을 한다면 엄중한 결과가 초래되고 요격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위협 수단을 잃게 됨. 미·일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면 한국, 중국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됨. ▲선스순(沈世順)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합작연구부 주임 = 중국이 북한에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없음. 모든 당사국이 이를 원해야만 북한의 로켓 발사는 비로소 중단될 수 있음. ▲다이쉬(戴旭) 군사전문가 = 북한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면 동북아 안정에 큰 변화가 올. 중국과 러시아 등 대국은 물론 유엔의 국제적인 영향력도 모두 손상을 입게 됨.

● 日 “북한 로켓발사 6자회담에 영향줄 것” (3/23)

-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3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힘.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키 국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6자



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함.

- 사이키 국장은 양자회담이 끝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나는 미사일 상황에 따라 6자회담이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그에게 전했다”면서 “그러나 참가국들은 6자회담 진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함. 북한은 다음달 초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술과 비슷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보고 있음.

● 美, 日 아오모리에 이지스함 배치(3/23)

- 북한이 장거리 인공위성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미국 해군 요코스카(横須賀)기지에 배치돼 있던 이지스함 스테덤호(8천800t급)가 23일 오전 일본 북서부 아오모리(青森)현 아오모리항으로 입항함. 미군측은 이 이지스함의 기항 목적을 “승조원의 휴양 및 지역과의 친선”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 또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이 이지스함의 순 번 함장은 이날 교도(共同)통신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북한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고 말함. 그러나 이 함선이 탄도미사일을 추격해 요격하는 능력을 갖춘 만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계 활동 차원에서 이동 배치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아오모리현에 따르면 미국측으로부터는 지난달 하순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이지스함 존 매케인호를 입항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미국측이 지난 20일 갑자기 스테덤호로 변경하겠다고 알려옴. 아오모리현 쓰가루시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는 미군의 미사일 방위용 이동식 조기경계 레이더가 배치돼 있음.

나. 미·북 관계

● 클린턴 “대북 식량·에너지지원 어려워질것”(3/28)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하면서 대북 식량·에너지 지원이 힘들 것임을 시사했음. 클린턴 장관은 폭스뉴스 ‘온 더 레코드’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의한 일정한 행동들을 유발시킬 것”이라면서 “그들(북한)은 에너지와 식량 도움을 호소해 왔으나 그런 필수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여기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접촉해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임을 강조하며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인공위성을 실은 미사일이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클린턴 장관은 또 “비핵화 초기 조치를 이끌 회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나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매우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이를 제안했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에 보내겠다는 뜻도 전달했지만 그들은 그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 일·북 관계

● 日방위研 “北 핵·미사일실험 계속 가능성”(3/26)

-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09년판 동아시아 전략 개관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26일 전함. 연구소는 이어 한계를 넘어서는 사례로 북한이 ▲핵탄두를 중거리 미사일 노동호에 탑재해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것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에 탑재해 미국 영토를 겨냥하는 것 등을 제시함.
- 연구소는 “이것이 실현되면 미국의 군사적 제재를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함. 아울러 연구소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및 미사일 장거리화 및 정밀도 향상을 겨냥해 “앞으로 재차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이와 함께 연구소는 북한의 권력투쟁 등에 따른 체제 변동의 영향으로 ‘피난민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피난민 대책에 대한 검토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가 피난민 유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중국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군사력을 국력의 원천으로 보고 이를 증강하고 있다”며 “원양에 진출하는 해군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함.

라. 기타

● EU, 국내 대북방송들에 4억원 지원(3/24)

- 유럽연합(EU)과 국제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국내 민간 대북방송 세 곳에 앞으로 3년간 총 4억원의 재정지원을 함. 이를 위해 국경없는 기자회의 장 프랑소와 주이아 사무총장과 자유조선방송(공동대표 한기홍, 이광백),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3사 대표들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협약식을 갖음. 대북방송 대표들은 협약식후 대북 방송 효율화를 위한 토론회도 열어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측에 국내 주파수를 배정해 국내 송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민간 대북방송들은 해외의 송신국을 통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어 전파 사용료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전파 세기도 약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직접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짐.

- 자유조선방송 이광백 공동대표는 토론회 자료에서 “북한 내부에서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일어나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외부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 북한 주민 스스로 북한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고 주장함. 열린북한방송의 하태경 대표는 “민간 대북방송을 강화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먼저 남북간 완전한 방송개방을 선언하고 그 1단계 조치로 북한의 대남방송에 대한 전파방해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안함.

● 北, 아이슬란드 대사에 리희철 임명(3/24)

- 북한의 리희철 아이슬란드 주재 대사가 지난 17일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함. 북한은 아이슬란드와 1973년 7월27일 수교함.
- 리 대사는 지난해 4월 스웨덴 주재 대사에 임명된 뒤 라트비아(2008.10), 핀란드(2008.10), 리투아니아(2008.11), 노르웨이(2009.2) 대사도 맡은 데 이어 아이슬란드 대사도 겸임하게 된 것으로 보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유엔 대테러사무국장 25일 방한(3/23)

- 마이클 스미스 유엔 대테러사무국장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임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5~28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힘. 스미스 국장은 방한기간 신각수 외교부 2차관 예방, 이준규 대테러국제협력대사와의 오찬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테러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373호) 이행 현황과 대테러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 안보리 결의 1373호는 ▲테러자금조달 행위의 범죄화 ▲테러행위 관련자들의 자산 동결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방지 등을 내용



으로 하고 있음. 스미스 국장은 또 법무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을 방문, 테러관련 국내 입법 현황과 국내 테러위협 평가 등에 대해 청취하고 최근 예멘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에 대한 연쇄테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임.

나. 한-중 관계

● 한-중 합참의장 회담..北로켓 협의(3/25)

- 김태영 합참의장은 25일 중국군 총참모장인 천빙더(陳炳德) 육군 상장을 만나 한-중 군사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우리의 합참의장 격인 천 총참모장은 김 의장 초청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이날 오후 방한하며 김 의장과의 회담에 이어 이상희 국방장관도 예 방함.
- 김 의장과 천 총참모장은 이날 회담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군사관계와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한의 발사 이후 중국의 역할과 양국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임.
- 합참은 “최근 남북 간 조성되고 있는 긴장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군의 긍정적인 역할과 노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천 총참모장의 방한은 2007년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방한기간에 특전사령부와 남부전투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등을 둘러볼 계획임.

● 中 “내달초 런던서 한-중 정상회담”(3/24)

-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제2차 금융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양국 정상회담을 갖음.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3일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 주석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초청을 받아 4월1일부터 2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힘.
- 허 부부장은 또 “후 주석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중미관계와 국제 금융위기 극복방안, 이란과 북핵문제 등 국제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함. 허 부부장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중미관계는 아주 좋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 금융위기 대응이나 국제 및 지역문제 처리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들이 이번 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함. 이밖에 후 주석은 이번 런던 방문기간에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아피시트 웨차치와 태국 총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음.

- 허 부부장은 그러나 후 주석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중·불관계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중국 때문이 아니며 중국은 프랑스가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후 주석은 4월1일 저녁 영국 여왕이 G20 지도자들을 위해 주최하는 환영리셉션과 브라운 총리가 거행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2일에는 금융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금융위기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천명할 계획임. 이번 런던 금융 정상회담에서는 ▲ 거시경제정책 협력 강화 방안 ▲국제 금융감독 강화 및 국제금융 시장 안정 대책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 등 3개 문제를 집중 논의함.

다. 한·일 관계

● 한·일, 외교부 대변인회의 연례화(3/25)

- 한국과 일본은 25일 서울에서 제2차 외교부 대변인 회의를 열고 대변인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힘. 한·일 외교부 대변인 회의는 2006년 5월 첫 회의 이후 3년만임.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과 고다마 가즈오(児玉和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공보업무와 관련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9월 양국에서 동시 개최되는 ‘한일 축제한마당’ 등 민간교류 사항에 대한 홍보에도 힘쓰기로 함.

라. 미·중 관계

● “美中 G20정상회담서 北문제 논의”<백악관>(3/29)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2일 주요 20개국(G20) 금융다자정상회담이 열리는 런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28일 밝혔음.
-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콘퍼런스콜 기자회견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매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미중 양자관계를 공고하게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유엔안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간주하는 북한의 발사준비에 대한 우려를 함께 공유하는 기회로 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어 마이클 프로먼 국제경제문제 담당 NSC 부보좌관도 “그들의 의제는 경제와 정치, 전략적인 문제를 포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이 미중 양자관계는 물론 국제현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하지만, 최근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축통화의 필요성



등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음.

- 대신, 맥도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달러화는 “대단히 강력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음.

● 中, 美하원 대만관계법 결의 불만(3/26)

- 중국은 25일 미국 하원이 대만관계법의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이는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 하원이 문제의 결의안을 가결한데 대해 크게 불만이라고 말하고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힘.
- 친강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와 인민은 미국이 대만관계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할 때부터 이에 단호히 반대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미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미 의회는 지난 1979년 미국 정부가 대만에 방어성 무기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만관계법을 제정, 중국의 반발을 사음.

● 후진타오-오바마 내달초 첫 정상회담(3/24)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초 런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허야페이(何亞非)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3일 밝힘. 후 주석은 오는 4월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금융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영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오바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중-미 양국 현안과 국제 금융위기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함.
- 후-오바마 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이번이 처음임. 후 주석은 이번 런던 방문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등과 각각 중-러, 중-영 정상회담을 가짐.

● 美-中, 지적권 기싸움(3/23)

- 미국과 중국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 결과를 놓고 서로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기싸움을 벌임. 두 나라는 WTO가 지난 1월 26일(이하 현지시각) 분쟁중재패널 결정문을 통해 “중국의 저작권법과 일부 관세 조치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예비 판정한 것을 지난 20일 공식화한데 대해 각각 정부 성명을 내고 이처럼 주장함.
- 론 커크 미 무역대표는 20일 성명에서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WTO가 밝힌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미 산업과 저술가 및 예술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적절



- 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커크는 앞서 의회 인준 청문회 등을 통해 “기존의 통상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음.
- 반면 중국 상무부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이날 “WTO 판정이 중국의 콘텐츠 검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면서 “WTO 결정이 중국이 지재권을 대거 침해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라고 밝힘.
 -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WTO 판정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 것은 WTO가 미국의 제소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손을 들어줬기 때문임. 즉 미국이 제소한 3개 분야 가운데 중국의 지재권법이 충분한 보호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과 지재권 위반 제품을 폐기 처분토록 하는 중국의 관세법이 미흡하다는 내용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 반면 중국이 불법복제 등 지재권 위반을 처벌하는 형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한 것임.
 - 워싱턴 소재 월트트레이드닷컴 관계자는 “미중 어느 쪽도 WTO 판정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통상 마찰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때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인 가운데 지재권 기싸움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주목된다고 말함.

마. 기타

● 한·미얀마 정책협의회 30일 개최(3/26)

- 제1차 한·미얀마 정책협의회가 오는 30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교통상부가 26일 밝힘.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마웅 민 미얀마 외교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열리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관계 현안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지역정세 등이 논의될 예정임.
- 우리측은 특히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미얀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미얀마 당국이 힘써줄 것을 당부할 계획임. 한·미얀마 정책협의회는 지난 1월 이용준 차관보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개최가 합의됨.

● 캄보디아 “태국군 국경사원에 진입”(3/25)

- 캄보디아 정부는 영유권을 놓고 지난해 태국과 무력충돌을 벌인 국경사원에 24일 오후 100여명의 중무장한 태국군이 진입했다며 태국측에 철수를 요구함.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각원의 파이시판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중무장인 100여명의 태국군이 국경을 넘어 분쟁을 야기한 11세기 힌두사원 프레이 베헤아르 서쪽



1km까지 진입했다고 말함. 시판 대변인은 그러나 양측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양측 모두 경계 상태라면서 캄보디아군 최고사령관이 태국군 병력에 대해 철수를 요청했다고 밝힘.

- 양국 군은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난해 7월 이후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음. 한편 양국은 이 사원을 캄보디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자 국경에서의 군사 대치를 시작해 지난해 10월에는 총격전으로 양측에서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함.

● “中, 소말리아 해역에 부대 추가 파견”(3/25)

- 중국 해군이 해적소탕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소말리아 해역에 내달 초 두번째 부대가 파견됨.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5일 중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역과 아덴만에 두번째 부대를 파견하는 준비를 마쳤다면 파병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것이라고 보도.
- 군함 3척으로 구성된 제1차 파견 부대는 지난 1월 6일 소말리아 해역에 도착해 중국과 대만, 홍콩 및 국제기관의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약 3개월간 수행해 오고 있음. 인민일보는 이번 파병이 병력의 증원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임무를 3개월째 수행 중인 부대원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군인은 없다고 밝혀 피로 누적 방지를 위한 교체 파병 가능성을 시사함.

● 나토사령관 “미·러관계, 불확실성의 시대”(3/25)

- 러시아가 유럽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침해하려고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사령관이 주장함. 나토군사령관인 존 크래덕 미 육군대장은 24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주변국과 유럽국들에 새로운 공격적 자세를 취했다며 “유럽 안보, 러시아의 주변국에 대한 역할, 그루지야에 군대를 보낸 것과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에 대한 인정 등에 관한 불협화음 탓에 미-러 관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 들었다”고 강조함.
- 그는 “러시아의 행동은 유럽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은 러시아와 관계가 냉전 종식 후 그 어떤 때보다도 다루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경고성 발언은 러시아가 이란 핵 문제에 협력한다면 미국이 중·동부유럽의 미사일방어(MD)기지 건설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긴장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것임.
- 크래덕 장군은 미군 당국은 실용적인 군사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 측 당사자들과 조만간 회담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미국 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그는 미국



으로 돌아갈 예정인 육군 여단 병력이 ‘억지력’을 위해 유럽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음. 그러나 이 대목에서 러시아를 언급하지는 않았음. 크래덕 사령관은 나토군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전역할 예정이며 미 국방부는 최근 나토군사령관에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해군대장을 내정함.

● **濠총리 워싱턴방문..아프간 추가파병논의(3/24)**

-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24일 새벽(이하 호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3박4일간의 국민방문 일정에 들어감. 러드 총리는 오는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음. 이 자리에서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문제를 비롯해 글로벌 경기침체 대책 등을 논의함. 러드 총리는 미국측의 아프간 추가 파병 요청을 수용해 호주군을 추가 파병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잇단 아프간 주둔 호주군 사망과 그에 따른 아프간 추가파병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해 추가 파병 규모를 크게 줄여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함께 양측은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에 앞서 경기회생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임.
- 러드 총리는 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을 잇달아 만남.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인 이날 밤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금융의 미래’ 회의에서 연설함.



[참조1] <표>李대통령 G20 및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영국 런던 제2차 G20 정상회의

일 시	주요 일정
3월 31일	오전 출국 오후 런던 도착 미국 CNBC 회견
4월 1일	오전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오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주최 리셉션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 주최 정상 만찬
4월 2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G20 금융정상회의 세션1 오후 G20 정상 업무오찬 G20 금융정상회의 세션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접견
4월 3일	오전 영국내 한국관련 단체 대표 접견 로이터, AFP, 블룸버그 합동인터뷰 영국 현지 경제인 오찬 오후 귀국

※일부 G20 회원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추진중

◇태국 파타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일 시	주요 일정
4월 11일	오전 제1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오후 아세안+3 정상 업무오찬 제12차 아세안+3 정상회의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정상 공식만찬
4월 12일	오전 제4차 EAS 정상회의 세션1 제4차 EAS 정상회의 세션2 오후 EAS 정상 업무오찬

(서울=연합뉴스)humane@yna.co.kr

*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3/26/0503000000AKR2009032616980001.HTML>